

---

# 「어촌뉴딜 300」 사업 시행지침(안)

---

2020. 02.





## 목 차



I. 개 요 .....	1
II. 어촌뉴딜300 추진체계 .....	4
III. 어촌뉴딜300 사업계획 수립·변경 .....	7
IV. 어촌뉴딜300 사업 시행 .....	14
V.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 .....	20
참고 자료 .....	26

# I. 개 요

본 사업시행지침은 전문가 자문,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, 지역개발사업관리 공공기관의 자문 등을 통해 작성 되었음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입니다.

담당기관	담 당 과	담 당 자	전화번호
해양수산부	혁신성장 일자리기획단		

\* 본 사업시행지침은 정책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1. 목적

- ☐ 동 시행지침은 '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,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

## 2. 어촌뉴딜300사업의 개요

- ☐ (의의) 낙후된 어촌·어항을 연계·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, 수산·관광 등 산업발전,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·문화·경제·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함
- ☐ (근거법령) 「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, 「어촌·어항법」
- ☐ (사업대상)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·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
- \* (사업대상 어항) 지방어항, 어촌정주어항, 마을공동어항, 소규모항·포구
- \*\* (배후 어촌마을) 사업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,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마을 및 사업대상 구역 설정
- ☐ (보조사업자)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

- ☐ (보조사업의 규정준수 의무)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,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,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### 3. 성과목표 및 지표

- ☐ 지자체(시·군·구)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

### 4. 지원의 형태 및 지원한도

- ☐ (재 원)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(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)

- ☐ (지원기준) 국비 70%, 지방비 30%(수익자 자부담\* 별도)

\* 수익자(마을 또는 주민 개인) 자부담 산정 기준

- 소득기반·체험관광사업 : 해당 토지의 100%, 시설비 20%이상 마을 자체 투자
- 경관 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정비 : 해당 시설비 10%이상 마을 또는 주민 개인 자체 투자 (10가구 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경우)

- ☐ (지원한도) 총사업비 150억(국비 105억, 지방비 45억)

\* 단, 지방비는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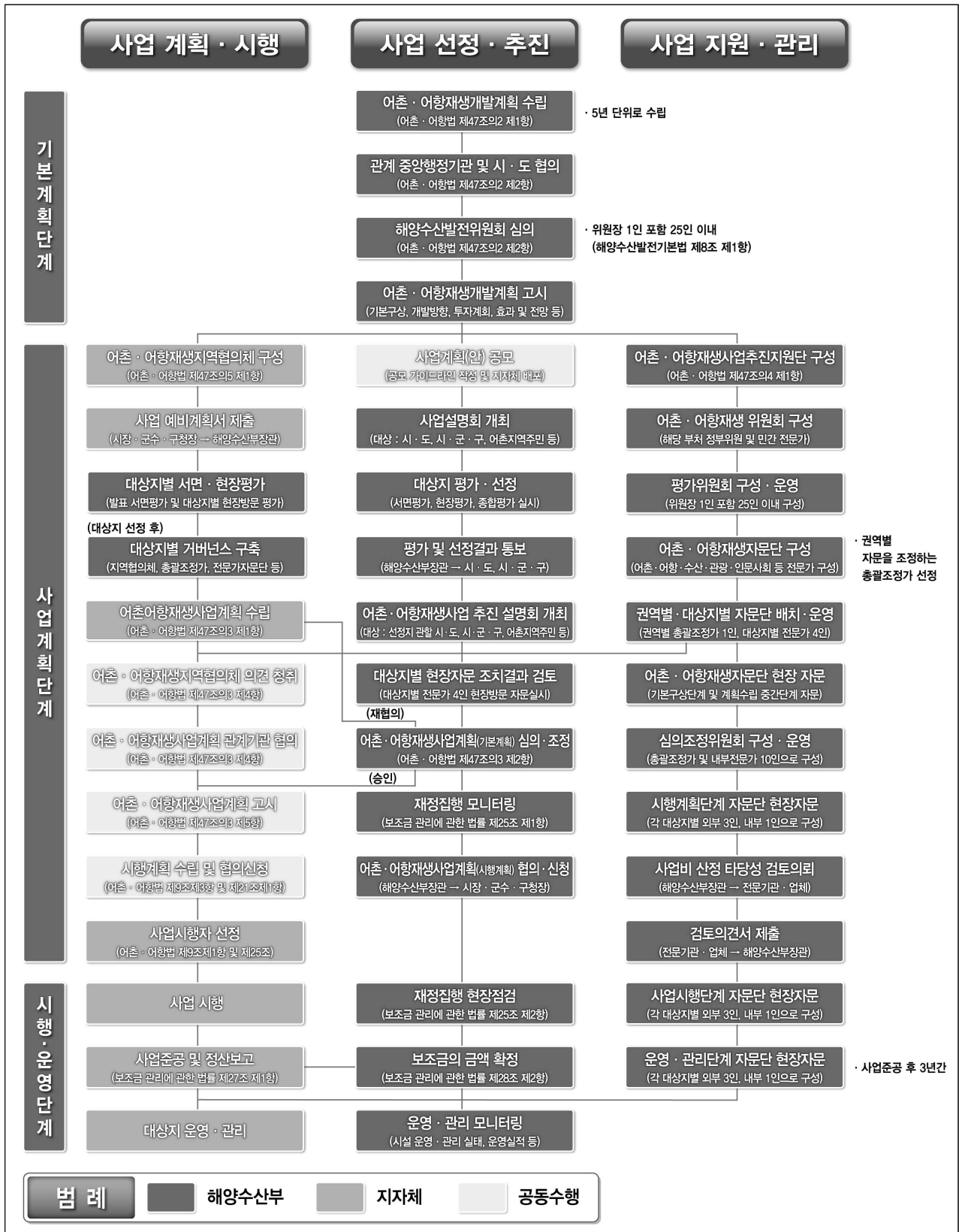
\* 지방비 중 시·도비는 30%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

- ☐ (사업기간)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른 보조금의 사용기간

## 5. 어촌뉴딜300사업 시행 시 중점 고려사항

- ①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·어항을 통합하여 활성화시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‘어촌·어항재생사업’이므로, 사업의 특성 및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- ② 어촌뉴딜300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계획, 어촌·어항발전 기본계획, 어항개발계획 등의 기존 국가계획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함
- ③ 어촌뉴딜사업계획 수립시 지역주민, 지역상인, 어촌뉴딜 관련 전문가,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「어촌·어항재생 지역협의체」를 구성하여야 하고, 시·도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
- ④ 지역주민, 전문가, 지자체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역 역량강화 교육 시행 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
- ⑤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시,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「어촌뉴딜 300 자문단」의 지역 배정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, 어촌·어항재생 지역협의체와 운영 및 사업추진 시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
- ⑥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어촌·어항을 찾을 수 있도록 낙후된 해상교통 인프라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우선적으로 설계·시행하여야 함
- ⑦ 어촌이 보유한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함
- ⑧ 공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이 스스로 어촌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도 마련하여야 함

## II. 어촌뉴딜300 추진체계



- \* 기본계획 :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대상지별 기본계획
- \* 시행계획 :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대상지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
- \* 상기 절차 외 타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경우 타법에 따른 절차 이행 필요

## 1 지자체 어촌뉴딜300 전담조직 구성·운영

### 시·군·구 어촌뉴딜 전담조직

- ☐ (구성) 지자체 내 담당조직을 별도 설치하거나, 기존 어촌·어항 업무 등 담당부서를 활용하여 상근 전담인력 배치
- ☐ (역할) 어촌뉴딜300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, 사업 관련 관계기관·부서간 업무 협의,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 구성·운영
- ☐ (운영) 지자체의 장은 업무의 연속성·효율성을 위해 사업기간 중 어촌뉴딜 전담조직 內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를 지양

### 시·도 어촌뉴딜 전담조직

- ☐ (구성) 지자체 내 담당조직을 별도 설치하거나, 기존 어촌·어항 업무 등 담당부서를 활용하여 상근 전담인력 배치
- ☐ (역할) 해당 시·도 내 어촌뉴딜300사업 지원조직으로서, 사업의 공정 관리 및 행정지원, 지자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
- ☐ (운영) 지자체의 장은 업무의 연속성·효율성을 위해 사업기간 중 어촌뉴딜 전담조직 內 실무담당자의 순환근무를 지양

## 2 대상지별 지역협의체 구성 · 운영

### 어촌·어항재생 지역협의체

\* (근거) ‘어촌·어항법 제47조의5

- ☐ (구성) 지역주민, 지역상인, 어촌뉴딜 전문가,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
- ☐ (역할)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지역밀착형 사업 발굴, 어촌뉴딜300 사업계획 수립 협의, 조성된 시설물 운영방안 협의 및 지원
- ☐ (특징) 사업기간 뿐만 아니라, 사업종료 이후 최소 3년간 운영하여야 함

## 3 해양수산부 지원조직 구축

### 어촌뉴딜300 자문단

- ☐ (구성) 지역계획, 경제, 어촌, 어항, 건축, 디자인, 관광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해수부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\*로 구성
- \* 지방청 관할 지역내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애로사항 해소지원
- ☐ (역할) 현장체감형 사업발굴 및 계획 수립·개발 상시 지원
- ☐ (특징) 사업의 결과물이 지역민에게 체계화되어 지역의 자산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3년간 전문가 자문단 지원

### 어촌·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

\* (근거) ‘어촌·어항법 제47조의4, ’20년 사업추진지원단 지정 : 한국어촌어항공단

- ☐ (구성) 어촌·어항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
- ☐ (역할) 어촌뉴딜300사업 운영·관리 지원, 어촌뉴딜300 자문단 구성·운영,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조사·연구 등



### Ⅲ. 어촌뉴딜300 사업계획 수립 · 변경

#### 1. 기본 방향

- 시·군·구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거나, 별도로 수립할 수 있음
- 시·군·구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시 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계획, 어촌·어항발전 기본계획, 어항개발계획 등의 기존 국가계획과의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함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사업을 「어촌·어항법」 제47조제6항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, 한국농어촌공사, 수산업협동조합, 어촌계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사업의 위탁 시에는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
  - \* 위탁수수료율 계상 등에 관해서는 ‘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1026호)’, ‘202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’, ‘농어촌정비법’ 등을 준용
  - \* 설계비·감리비 등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,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준수하여 산정(요율 적용 대상 사업비는 SW 사업, 설계비 등을 제외한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-관련 지침 내용에 있는 범위 내)
- 시·군·구는 선정지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‘어촌·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’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부에 제출해야 함
- 시·군·구는 기획단계(초기)에서 해수부에서 구성한 ‘어촌·어항재생사업 지역협의체’ 및 ‘어촌뉴딜300 자문단’과 긴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함
- 시·군·구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각 단계별로 사업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함

## 2. 기본계획 수립

### ① 사전조치 단계

- 어촌뉴딜300 사업계획(기본 및 시행계획)을 수립하기 이전에 가능하면 부지확보(국공유지 활용, 사유지 협의 매수 등)를 사전 절차 완료 추진
- 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 완료 가능한 행정상의 절차(지방재정투자심사, 계약심사 등)는 선제적으로 추진

### ② 세부 지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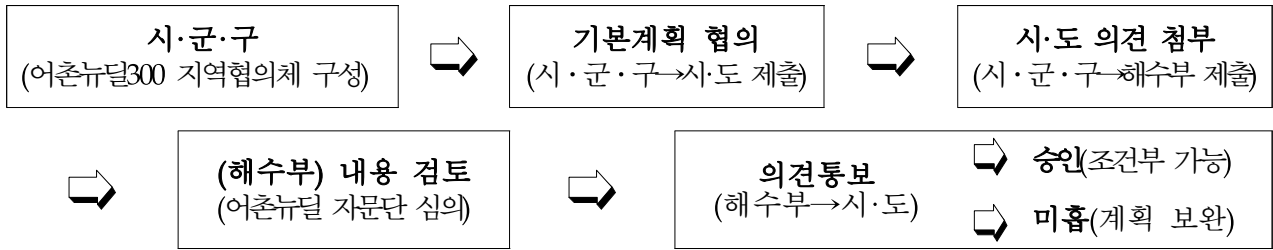
#### < 기본 계획 >

- ◇ **수립 주체** : 시장·군수·구청장      \* 협의 : 시·도 / 승인 : 해양수산부
- ◇ **내용** : 어촌뉴딜 300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기본구상, 개발계획, 개발여건, 사업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
- ◇ **행정절차** : 관계법령, 지침, 기준 등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
- ◇ **작성 원칙**
  - ① 시·군·구는 사업 선정 시 제출한 공모사업계획서에 기초한 기본계획 수립
    - 공모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변경 사유 등의 내용을 첨부하여 보고서에 수록
  - ② 지역주민, 관련 전문가, 시·군·구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"어촌·어항재생 지역협의체"의 의견교환 및 결정을 통해 계획 수립
    - 지역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적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방안 수립
    - 지역의 자율적 개발역량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간의 협력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현장 전문가 활용계획 수립

- ③ 객관적 분석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게 수립하되, 사업 취지와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
- ④ 사업비 투자계획은 공통사업·특화사업·S/W사업·사업지원·타부처 연계사업으로 구분,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
- 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부지확보가 필요한 경우 부지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
  - 시·군유지 또는 국유지 등을 활용하는 경우, 소관기관 협의내용, 협의일정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
  - 개인소유 부지일 경우, 취득방법(협의 매수/수용), 소요(예상)비용(감정 평가액), 취득일정, 증빙서류(토지매매계획서 등)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
  -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H/W사업 부지매입비나 소모성 기자재 구입을 위한 지원은 불가
- ⑥ 적정 수요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
  - 무분별한 지역 숙원사업의 반영, 사업구역(어항의 배후어촌)과 원거리 지역의 사업계획 수립은 배제하여야 하며 레저선박 계류시설, 각종 센터 등 수요에 의해 설치하여야 되는 시설물은 정확한 수요 분석을 통한 규모를 산정하여 계획 수립
  - 특히 시·도에서는 관할 시·군·구가 수립한 기본계획이 유사·중복\*되지 않도록 내역 사업별 충분한 사전 및 타당성 검토를 이행
    - \* 예) 수요를 초과하여 인접해 있는 ‘가’군 A항과 ‘나’군 B항 모두 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·조정
- ⑦ 사업의 중복 계획 수립의 방지
  - 어촌뉴딜 300사업과 성격이 유사한\* 지역개발사업과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구내에 他 국고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보고서에 수록
    - \*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,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,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,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(도서종합개발사업),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
- ⑧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, 내역 사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

- ⑨ S/W 사업비(주민 역량강화, 홍보·마케팅 등)는 전체 사업비의 5%이하로 계획 수립
- S/W사업이 타 보조사업(체험마을 사무장 지원, 일반농산어촌사업, 성장촉진지역사업 등)으로 지원되고 있을 경우,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중복지원 불가
  - \* 사무장 등의 인건비(국비+지방비+자부담)는 최저임금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지급하며, 국비는 월 최대 100만원 이내로 편성
- ⑩ 지역 소득증대사업(소득기반사업, 체험관광사업 등)은 수익자(주민 등)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, 해당 토지의 100%, 시설비의 20% 이상의 자부담\* 필요
- (예) 카페, 숙박시설, 향토 음식점 등의 소득사업은 반드시 자부담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사업계획 작성
  - 소득사업은 소득법인이 직영 운영(시설물.운영권 등의 임대, 제3자 사용수익, 대부 등 불가)
  - \* 지방비 등으로 자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 자부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(단, 지방비로 충당시 보조율 30% 초과분에 한하여 인정)
- ⑪ 경관개선을 위한 사유시설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해당 시설비의 10% 이상의 자부담\* 필요
- (예)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간판, 지붕, 담장 등 정비
- ⑫ 지방어항 개발계획의 변경
-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「어촌·어항법」 제21조에 따라 우리부(어촌어항과)와 협의하여야 하며, 필요시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 협의 진행
- ⑬ 공공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 자산화 효과가 구현 될 수 있도록 '자생력 강화' 부분의 사업계획(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, 사후 관리계획 등) 수립 의무화\*
- \* 사업계획 승인 시 '자산화 강화부분' 보고서 포함, 차년도 사업 평가 반영 예정

### 3 기본계획의 협의 및 승인 절차



- 시·군·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·도와 사전 협의하고 해수부에 제출하여 기본계획 심의조정을 거쳐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행계획 수립
  - 조건부 승인의 경우 심의조정에 따른 조치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하여 최종 확정 후 시행계획 수립
  - 계획 보완의 경우 심의조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보완 후 기본계획 재심의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 승인 시 즉시 주요 내용을 고시
  - \* 어촌·어항법 시행령 제7조(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·변경의 고시) 준용

### 3. 시행계획 수립

- 시·군·구는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
  - \* 시행계획 :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대상지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
- 시·군·구는 시행계획 수립 후 승인 전에 시·도와 사전 협의 진행
- 시·도는 기본계획 대비 구체화된 내용과 변경내용 유무 등을 확인하여 관례법령, 사업시행지침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·군·구에 시행계획에 관한 협의 의견 제시

- 시·군·구는 시·도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승인
  - 시·도는 시·군·구로부터 보고받은 시행계획 승인결과를 해수부에 보고
    - 다만, 기본계획 대비 기능별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해당기관과 협의 후 진행
      - i) 기능별 사업비\* 기준 10%미만 변경 시 : 협의 불필요
      - ii) 기능별 사업비 기준 10%이상 20%미만 변경 시 : 시·도지사
      - iii) 기능별 사업비 기준 20%이상 변경 시 : 해양수산부장관
- \* 기능별 : 공통사업, 특화사업, S/W사업, 사업지원(타부처연계사업 제외)
- \* 변경비율 산정은 절대값을 적용하고, 절대값으로 계산한 비율의 1/2 적용
-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대비 총 사업비의 50% 이상 변경 시에는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
- \* 변경비율 산정은 절대값을 적용하고, 절대값으로 계산한 비율의 1/2 적용

## < 시행계획 >

- ◇ **수립 주체** : 시장·군수·구청장      \* 승인 : 시장·군수·구청장
- \* 협의 : 시·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
- ◇ **내용** : 주요시설 및 사업비 명세와 세부설계도서 등
- ◇ **행정절차** : 관계법령, 지침, 기준 등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
- ◇ **작성 원칙**
  - 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계획 수립
  - ②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, 공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(승인) 가능

#### 4. 기본·시행계획 변경

-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기본 및 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

##### < 기본·시행계획 변경 >

◇ 수립 주체 : 시장·군수·구청장 \* 승인 : 시·도지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

##### ◇ 변경 원칙 및 절차

- ① 기본계획 변경 : 시·군·구는 기본계획 수립 후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·도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 필요
  - i) 주요 시설물의 사업대상지 위치 변경
  - ii)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대비 총 사업비 50% 이상 변경 시
    - \* 변경비율 산정은 절대값을 적용하고, 절대값으로 계산한 비율의 1/2 적용
- ② 시행계획 변경 : 시·군·구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에 따라 해당기관과 협의 후 진행
  - i) 기능별 사업비\* 기준 10% 미만 변경 시 : 시·도지사
  - ii) 기능별 사업비 기준 10% 이상 변경 시 : 해양수산부장관
    - \* 기능별 : 공통사업, 특화사업, S/W사업, 사업지원(타부처연계사업 제외)
    - \* 변경비율 산정은 절대값을 적용하고, 절대값으로 계산한 비율의 1/2 적용
- ③ 시·도지사 협의 시 시·군·구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·도에 제출
  - 시·도는 사업목적, 법적 제약 유무, 법령 위배여부, 기본·시행계획 변경 필요성·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 후 통지
- ③ 해수부 협의 시 시·군·구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·도에 제출
  - 시·도는 사업목적, 법적 제약 유무, 법령 위배 여부, 기본·시행계획 변경 필요성·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·군구 제출 자료와 시·도 검토의견을 해수부에 제출
  - 해수부는 시·도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기본·시행계획 변경 필요성·적절성을 판단한 후 통지

## IV. 어촌뉴딜300 사업 시행

### 1. 관련 법령 준수

- 사업 시행 및 사업비 집행 시에는 아래 규정을 적용
 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 「어촌·어항법」 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

### 2. 사업비 집행기준

-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「별도의 계정」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
- 시·군·구는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가능한 보조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
  -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
  -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
  - 사업비 집행 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·첨부하여야 함(증빙자료 없이 지급한 사업비는 환수)
  - 사업비의 집행 시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, 보조사업 카드사용 내역서여야 함
  -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접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 금액 범위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



-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 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(통장 인출 날짜) 순으로 정리
  -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A4 용지에 원본을 부착·편철
  - 사업비 통장·회계장부·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·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
  -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
-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(지급한 사업비는 환수)
- 시·군·구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정산·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

### 3. 자부담 집행기준

- 지역소득증대 사업, 경관 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정비 등 사업비 일부를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아래 규정을 준수하여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
  - 지역 소득증대 사업은 마을자체 투자금(해당 토지 100%, 시설비 20%)이 확보된 후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시행
    - \* 1가구가 30%이상 부담을 금지하며 세대단위 및 가족단위는 1가구로 인정
  - 경관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정비사업은 10가구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,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간판, 담장, 지붕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10% 자부담
    - \* 시설물 지원기준(자부담 10%) : 국비 63%, 지방비 27%, 자부담 10%

- 사업 착수 전 자부담금 전액이 (위탁)사업시행자 통장에 입금 완료된 후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우선 집행
- 입찰분쟁을 방지하고,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(또는 위탁기관)이 사업입찰 및 자금집행 등 대행
- 토지 확보가 의무인 사업은 토지가 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
  - 임차 또는 지상권·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토지 확보는 토지 미확보로 간주
  - 다만,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(10년) 이상 사업추진 법인 명의로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기가 사전에 설정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득사업 시설물 설치 지원 가능
- 지방비 등으로 자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경우 자부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
  - 단, 지방비로 충당시 보조율 30% 초과분에 한하여 인정

#### 4. 계약체결 기준

- 사업시행자(시·군·구 및 위탁시행기관)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·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  - 다만, 계약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 시 지명입찰·수의계약도 가능
- 사업 특성상 H/W사업과 S/W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가능
  - 사업 시행은 사업계획에 대한 해수부의 승인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하나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, 지역협의체 운영비, 주민 교육비, 자문비 등의 사업비는 사업계획 승인 이전 시행 가능

- 하드웨어 시설 중 추정 설계비가 2억원('20.1.15 이후 발주 시 설계비 1억원)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하여 「공공건축사업계획서 사전 검토」 대상으로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함
- 사업(자부담 및 S/W사업 포함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 설계,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산출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, 건설기술진흥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여건, 업무량, 지자체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적정 대가를 산정할 수 있음
- 지역주민 대상의 해외선진지 견학은 사업기간 중 1회 10명 이내로 직접경비 중 50% 이상 자부담 시 가능
- 기타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을 적용

## 5. 지역 소득증대

- 지역 소득증대(소득기반·체험관광 등) 사업은 마을자체 투자금(해당 토지 100%, 시설비 20%)이 확보된 후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의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시행
  - \* 1가구가 30%이상 부담을 금지하며 세대단위 및 가족단위는 1가구로 인정
- 토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토지가 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
  - 임차 또는 지상권·지역권 설정 등은 토지 미확보로 간주
  - 토지 등기는 시장·군수, 법인(단체) 명의여야 하며, 개인 명의를 지원 제외
- 계획수립 단계에서 객관적인 분석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사업규모를 결정하여 향후 과도한 운영관리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

- 사업 시행 이전에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운영주체, 운영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
- 소득법인은 시설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기금 납입 협약을 체결(기금 납입 협약체결 이후에만 지역 소득증대사업 시행 가능)
  - 기금 납부는 해당 사업 준공 후 매년 납부하되 납부비율을 지원 받은 총보조금의 2~5%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
  - \* 기금은 다시 재분배할 수 없으며, 대상지 사업 유지관리비, 사업 확장, 시설 정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
- 지원 제외
  - 사업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를 위한 지원 제외
  - \* 개인 또는 전문 법인이 운영하는 숙박시설, 전문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비
  - \* 다만, 사업계획에 의해 마을 공동체가 운영하는 체험객과 관광객의 숙박 등의 제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는 지원 가능

## 6. 역량강화

-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사업계획에 대한 해수부의 승인 이전에도 시행 가능
  - 지역 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직접 또는 위탁 추진 가능
- (지원 대상) 시·군·구 공무원 및 사업 대상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S/W 사업 지원
  - 단계별·주체별\*·대상지별로 차별화된 사업내용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·학습방법 적용
- \* 사업추진 시기에 따라 계획·시행·운영 등으로 구분하고, 지자체 공무원, 지역 리더(어촌계장 등), 사무장, 일반 주민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세분화
- 지원 제외
  - 시설물 설치비용 및 완료 시설물의 운영비(전기료, 난방비, 인건비, 유지보수비 등 경상비) 지원 불가
  - 시·군·구에서 주관하는 축제·행사·홍보사업 지원 불가
  - 타부처 연계사업 등의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비 지원 불가

## V.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 및 사후관리

### 1. 시설물 등기

- 시·군·구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·시설물에 대해 시장·군수·구청장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 등기를 한 후 정산 실시
  -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사업비를 전부 부담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명의로 등기
  - 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은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법인(단체)이 동등으로 등기
- 시·군·구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,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처리
- 위탁시행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면서 인계인수

#### < 유의 사항 >

- ①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(부분 준공)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
  - 지역 소득증대 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은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법인(단체)이 동등으로 등기
- ② 시·군·구는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공종별(연차별, 단계별)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가능
- ③ 인계인수 시 준비사항은 1) 시설물 인수인계서, 2) 사업비 준공도서(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), 3)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, 4)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, 5) 등기이전서류, 6) 관련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관련 서류, 7)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

## 2. 사업 준공

- 준공 검사 :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- 관련 법령
  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어촌 · 어항법」 등
- 시 · 군 · 구는 공사 등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시 · 도에 결과 보고
- 시 · 도는 준공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(건축물의 준공 전 사용허가 포함)
- 시 · 군 · 구는 사업 준공 이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시 · 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)

## 3. 시설물 등 운영 · 관리

- 운영 · 관리 주체 :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- 시 · 군 · 구는 조성된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점검 · 일상 점검 ·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
- 준공된 시설물은 시 · 군 · 구가 운영 ·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효율적인 운영 ·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
  - 시 · 군 · 구가 별도의 운영 법인에 운영 ·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양측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준공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처리내용을 규정하며, 필요 시 시 · 군 · 구는 운영 ·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

-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 또는 주민 스스로 부담하되, 필요한 경우 시·군·구비로 지원 가능(국비가 포함된 사업비로 지원 불가)
-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조건 및 절차에 따름
- 시·군·구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일체에 대해 소유권 등기 및 운영·관리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 운영이 발견될 시 시정조치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
- 시·군·구는 마을 상·하수도, 전기, 가스, 정보·통신 등 지하시설물 설치 시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및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

#### 4.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처분

-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(시·도지사)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

- ①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
- ② 양도, 교환, 대여(임대차, 사용대차), 담보의 제공
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 기준
	부터	까지	
부동산과 종물	준공일	10년간	매각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,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
기계, 장비	구입일	5년간	

- \*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·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함
- \*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
- \* 관리기간이 초과하였고, 사정 상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가급적 매각대금을 어촌뉴딜 300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함



## 5. 사업 점검

### ○ 정기점검

-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시·도와 시·군·구에 대하여, 시·도는 시·군·구에 대하여, 시·군·구는 사업대행 전문기관에 대하여(전문기관 대행 시에만 해당) 사업수행 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을 실시(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)

\* 해양수산부 : 연 1회 이상 / 시·도 : 반기별 1회 이상 / 시·군·구 : 분기별 1회 이상

\* 시·군·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시·도의 합동 점검 가능

### ○ 특별점검

- 해양수산부,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는 민원 발생,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, 사업 지연,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

## 6. 검사

-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·서류·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

- 해양수산부, 시·도 및 시·군·구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해양수산부, 시·도, 시·군·구는 시설물 운영자 등이 중대한 위반사항을 범하거나 시정명령에 대한 3회 불이행 시 시설물 사용허가 취소, 사업 취소,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## 7.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 등

- 법적 근거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(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)
-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해양수산부 또는 시·도지사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
-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
-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-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 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
- 기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## 8. 벌칙

- 법적 근거 :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(벌칙)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보조사업자, 간접보조사업자, 보조금 수령자)
-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보조사업자, 간접보조사업자)
-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이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·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보조사업자)

-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,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보조사업자, 간접보조사업자)

## 9. 사업평가 및 환류

- (사업 평가)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·시달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
- (환류) 성과평가, 집행실태 파악(모니터링)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추진
  - 해양수산부는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사업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의 차등 교부, 차후 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가·감점 부여

## 10. 기타

-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·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
-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
  - 시행계획 승인 후부터 용지매수 보상비 집행 가능
-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및 계약 예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소상공인, 지역 건설업체, 지역 청년 등 참여 유도 및 우선 배려